

경기도, 車 5분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내년 1월부터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실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 극장 등에서 5분 이상의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태풍매미 피해 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기업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은 모든 기업(개인이나, 건물, 수송분야도 포함)은 이미 융자받아 사용하던 에너지절약시설이 태풍 피해로 보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할 경우 보수비용으로 기추천액의 50%까지 추가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로 설치한 시설의 손실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재설치하는데 소요자금의 100%까지 연리 2.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업체당 100억원(절약시설설치사

업 기준)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의 소수력발전시설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기전설비 및 토건설비 보수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강원 등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지사를 중심으로 침수가되거나 손상을 입은 기업체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 현장점검과 함께 관리방법 및 기술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하수처리관거 분할발주 안한다

하수종말처리관거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공중·하수종말처리관거 분할발주가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규모공사는 조달청에 계약대행 의뢰가 추진되며 기존시설물 개량계획시 사전 종합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업무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규모가 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부터 입찰까지 총체적인 업무개선안을 마련, 현재 검토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최근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와 관련된 공직비리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개선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이 조달청에 의뢰해 중앙조달방식으로 추진되며 시군별 하수처리장 입찰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중앙조달의 경우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자율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해 의무화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관거 건설공사 발주시 공중·하수종말처리관거 분할발주가 지양되고 1개 시공사에 일괄도급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경쟁으로 추진돼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구간별로 분할 발주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분할발주를 1개 시공사에 일괄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사관련 비리를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하수처리공법 선정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사와 공법을 동시에 선정하는 안이 검토중이며 지자체공사설계심의시·도 이상의 건설기술심의회 구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시설물 개량계획시 사전 종합평가 의무화 및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물에는 공사 참여 기능공의 이름까지 명시되는 공사실명제 실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03.9.4.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주민이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즉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수처리시설 제조규격 강화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부터는 재질의 성능문제로 일체형 PE단독정화조의 제작만 허용하던 것에서 한국산업규격(KS) 개정 사항을 반영, 집합형 PE단독정화조도 제조가 허용된다.

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성능 향상과 파손 방지를 위해 제조규격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가 기존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된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한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칸막이 두께는 최소 6mm 이상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또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노를 분리 배출할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분리저장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축산퇴비를 생산해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8월부터 낙동강오염총량제 실시

낙동강 오염총량제가 오는 2004년 8월 광역시를 시작해 2006년까지 낙동강 전역에 확대되며, 2010년까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차관 주재로 부산·대구 등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낙동강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광역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오염총량제는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 상수원 수질을 수질환경기준 II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달

성·유지시키기 위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 목표를 정하고 낙동강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된 목표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강원-경북 경계(낙본A)는 1.5mg/L, 경북-대구(낙본F) 2.0mg/L, 대구-경남(낙본G) 2.9mg/L, 경남-부산(낙본L)은 3.1mg/L, 금호강 합류지점(금호C) 4.0mg/L 등 총 8개 지점이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대표자 자정 결의대회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표 90명은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 수원지점 안산지청 회의실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앞서 주민 건강을 생각하며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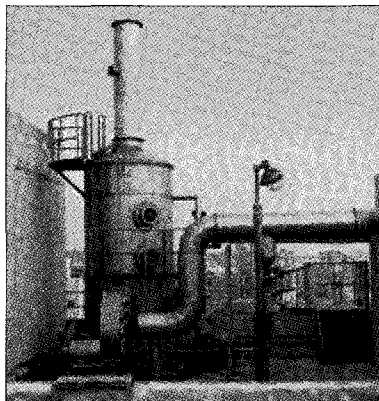
이들은 이어 주된 사법처리 대상인 도금, 피혁, 화학업종 업소에 대해 인, 질소 처리문제와 악취줄이기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안산지청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반월·시화지구 환경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

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앞서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27명을 적발하고 이중 40명을 구속 기소, 8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9.17]

'다이옥신' 초과배출 소각장 무더기 적발



전국 자치단체 및 군부대,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상당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간당 소각처리 능력 200kg 이상인 전국 폐기물 소각 시설 336개소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결과, 10% 가량인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밝혔다.

소각처리능력이 2t 이상인 대형소각시설의 경우 93개소 중 11개소가, 2t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은 243개소 가운데 22개소가 각각 기준을 초과했

다.

대형소각장 가운데는 인천 서구 석남동 D산업(주) 소각시설이 375.370ng/m³로, 권고기준(40ng/m³)의 9배를 초과해 가장 높았다.

중·소형 소각시설 중에서는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S공단 소각장이 417.707ng/m³로, 권고기준의 10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 2개소는 시설폐쇄, 3개소는 사용중지, 나머지 28개소는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했다"며 "올해부터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시간당 처리능력 2t 미만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다이옥신 기준초과 배출 소각시설은 경기도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6개소, 인천 5개소, 경남 3개소 등 순이었다.

환경부, 공단폐수처리장 8곳 신설

연말까지 평택현곡지구내 공단폐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착수되는 것을 비롯, 내년까지 8개 공단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공장밀집지역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공공처리할 수 있는 공단폐수처리장 8개소를 신설키로 하고 오는 11월과 내년

초에 나누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5일 밝혔다.

오는 11월 발주되는 처리장은 평택 현곡 처리장이며 내년 초 공사가 예정된 곳은 천안제4 처리장 등 7곳이다.

이들 공단폐수처리장은 단위시설당 최소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440억원을 정부에 요구해둔 상태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내년에 하천·호소 수질 유지를 위해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나선다.

오수처리시설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던 1일 2만1천428m³의 오수를 BOD 20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식품업, 숙박업 등 1만8천391개소에 고성능 정화 시설과 함께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예산 11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울산시, 13개 환경위반업체 적발

울산시는 지난 7 8월 대기배출 230개업소, 수질배출 199개업소를 점검해 13개 사업장(대기 8, 수질 5개)을 적발,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울주군 상북면 G업체는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

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울주군 웅촌면 I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오다 고발 및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또 울주군 온산면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남구 용잠동 Y업체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

수질분야의 경우 북구 염포동 T업체는 공공수역에 유류유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남구 삼산동 S셀프세차장과 동구 K세차장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10일, 울주군 삼남면 Y업체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고발 및 폐쇄명령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국내기업 60% 국제환경규제에 무대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6일 산업연구원(KIET) 한기주 연구위원이 최근 국내 9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인지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비여부에 대해 40.6%가 '적극 대비'라고 답한 반면 절

반이 넘는 59.4%가 '대비 안함'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3.5%가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작 29.3%만 응답, 대조를 보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물음에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3%에 그쳤고 52.7%가 '약간 안다', 15.8%가 '잘 모른다', 3.7%가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전체의 39.0%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16.2%만 같은 대답을 해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클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0%, '상당히 클 것'이 50.7%에 이른데 비해 '영향이 별로 없을 것'(30.3%), '영향이 거의 없을 것'(2.7%), '모르겠음'(7.3%) 등 소극적인 견해도 전체의 40.7%나 됐다.

총 시설투자 대비 온실가스 배출저감 투자 비중이 '5% 이상'이라는 응답은 15.9%에 불과한데 비해 '1% 미만'이라는 대답은 23.9%나 돼 국내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9.17]

환경기술평가 증가 앙상 뚜렛

3개 기술, 신기술 및 검증서 발급

환경부는 최근 환경업체로부터 신

청이 들어온 환경기술평가를 통해 3개 업체의 기술에 대해 신기술 및 기술검증 증서를 발급했다고 지난 9월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환경시설관리 공사의 하폐수처리를 위한 침지식 평막 모듈(MEMSYS System)기술에 대해 제73호 환경신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제53호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했다.

또 엔비오로텍(주)의 오존으로 하수슬러지를 분해, 잉여슬러지의 배출을 감량화한 기술도 신기술 제74호, 기술검증 54호를 획득했다.

(주)태영과 씨아이바이오텍(주)이 공동 개발한 씨멘닥(CIMEN-DOC) 고정상 담체를 이용한 하수의 유기물

및 질소 인 고도처리 기술(TBCR)은 제55호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 신기술 및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앞으로 3년까지이며, 각종 환경공공 공사 입찰시 가점혜택 등을 받게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환경 신기술평가 중 기술검증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함에 따라 업체의 환경기술평가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환경일보]

서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서울시가 한강으로 방류되기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수질을 항상

시키기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 15일 고시했다.

현재 하루 581만을 처리할 수 있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3차 처리)시설이 도입되면 2차 처리까지 거의 제거되지 않는 질소, 인과 같은 성분을 걸러낼 수 있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05년 9월부터 청계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중랑 하수처리장(171만/일)에 하루 46만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2007년까지 우선 도입키로 했다. ◀

해외산업시찰단 모집

- ▣ 내용 : 싱가포르 수처리 박람회
- ▣ 일시 : 2003년 12월 2일 ~12월 6일 (4박 5일)
- ▣ 금액 : 899,000원 (일체비용)

*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 참조